

누구나 쉽게 경연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3회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2017.5

누구나 쉽게 경연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3회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제3회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통일, 그래서 더 행복한 대한민국!

2017. 5. 27

(사)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Contents

I.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1. 국무회의란?	8
	2.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란?	9
	3. 제3회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준비	10
	① 팀 구성하기	
	②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토의 주제 선정하기	
	③ 직책 부여 설정하기	
	④ 각 팀원의 수행 직책 결정하기	
	⑤ 담당 수행 직책별로 토론 쟁점 찾아내기	
	⑥ 직책 부여 간의 갈등과 대립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⑦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주제에 대한 정책을 의결하기	
	4. 대본 작성 요령	14
	① 대본 작성을 위한 기획 회의하기	
② 대본 작성의 개요 정하기		
③ 대본 표지와 내지 내용 보기		
④ 대본 표지와 내지 샘플 보기		
<hr/>		
II. 제3회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시행 안내	1. 목적 및 개요	20
	2. 시행 주제	20
	3. 시행 내용	20
	4. 시상 내역	21
	5. 심사 기준	21
	6. 대회 일정	22
	7. 문의	23

III. 참가신청 서류 (2016년 샘플 포함)	1. 참가신청서	26
	2. 대본 기획서 샘플 (2016년 최우수상 팀 샘플 보기)	28
	3. 대본 샘플 1 (2016년 최우수상 팀 샘플 보기)	34
	4. 대본 샘플 2 (2016년 우수상팀 샘플보기)	50
IV. 제2회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의 경연대회 수상 수기	1. 최우수상 수상 수기	82
	2. 우수상 수상 수기	84
V. 제2회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의 경연 현장		86

I

누구나 쉽게 경연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1. 국무회의란?

TIP1 모의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선 국무회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아래 국무회의 의사규칙을 숙지하고 대본에 반영해야 합니다.

가. 국무회의란, 대통령이 하는 일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정책을 심의하며 의결하는 최고정책 심의기관입니다.

나.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정책이란?

- | | |
|---|---|
|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11) 행정 각부간의 권한 확정 |
| (2) 선전 및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 (12) 정부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대통령령안 | (13) 국정처리상황의 평가 및 분석 |
| (4) 예산 및 결산,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 (14) 행정 각 부의 중요정책 수립과 조정 |
| (5) 대통령의 비상조치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15) 정당해산의 제소 |
|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 (16)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에 대한 심사 |
| (7) 국회의 해산 | (17) 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검찰총장·국립대학교 총장·대사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
| (8)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의 요구 | (18) 기타 대통령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등입니다. |
| (9) 영전수여 | |
| (10) 사면 및 감형과 복권 | |

다.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며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각 부처 장관 외)이 국무회의의 구성원입니다.

라. 국무회의를 여는 진행순서는 개회-국민의례-개식사-주요안건 토의 및 처리-폐회입니다.

마.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무위원의 자격은 동등하며 다수결에 의한 합의 의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구성원 1/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사. 결정한 사항들을 추진합니다.

2.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란?

가. 모의국무회의란 실제 국무회의 형태를 모델로 하여 학생들이 대통령 이하 각 부처 장관의 역할을 맡아 진행하는 정책 토론회의입니다.

나. 주요 정책의 범위는 통일 1년 후의 대한민국입니다.

다.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참여의식으로 통일한국에 대한 정책을 발굴합니다.

라. 정책을 선정하여 모의국무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생각의 수준을 높입니다.

마. 다른 부처 간의 협의나 논쟁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통일의식을 지닙니다.

바. 모의국무회의를 완성하면서 국가의 통일정책에 참여해 본 주인공으로서의 자부심과 성취감을 체득합니다.

3. 제3회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준비

TIP2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고 준비하면
예습, 복습의 과정처럼 체계적인 학습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① 팀 구성하기

- 동아리 혹은 함께 공부하는 학과 동료들과 마음을 합하여 모의국무회의의 참여를 위해 팀을 구성합니다.
팀원의 인원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6명에서 15명까지 가능합니다.
- 행사 참여 및 진행이 수월할 수 있도록 팀 대표(팀장)를 선출합니다.

②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의 토의 안건 선정하기

TIP3 통일 1년 후의 대한민국을 가상하는 만큼, “통일편익”에 중점을 두어 안건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건의 전개

총 시간이 4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장관이 개별적으로 각자의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여러
부처가 ‘협업’하여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1개의 안건을 선정하여 토의하는 형식으로 전개하십시오.

관련 자료

안건 선정 관련 자료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에서 통일미래 비전과 관련된 자료를
찾거나, 2014 통일문제 이해(통일부 통일교육원 발간),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통일한국 2040 보고서),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DBpia, 국회도서관 등의 논문자료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통일교육원 발간자료는 붙임 참조)

2015년~2016년에 실시한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의 경연대회의 우수작을 참조하여도 좋습니다.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자료마당-통일교육 연구자료-공모전 자료’에 게시)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의 주제는 <통일, 그래서 더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준비 포인트

평화통일이 이루어진 1년 후의 통일한국을 상상해 봅니다.

통일된 한국은 수많은 가능성과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국무회
의에서는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과 동시에 통일한국으로서 얻을 수 있는 편익들을 최대한
활용할 새로운 정책들이 논의되어야 하며, 또한 국제적인 정세 변화에 따른 외교 정책들도 중요하게 다뤄져
야 할 것입니다.

TIP4 아래 자료를 통해 통일이 가져다 주는 국내외적 편익을 알아보고,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의 토의 안건 선정에 참고해 보세요.

통일의 국내적 편익

인구 강국 : 통일로 저출산·고령화·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

- UN ‘세계 인구 전망’에 따르면 통일이 생산가능인구가 전보다 4% 증대(약 20만여명)하고 내수 및
노동시장의 동시 확대가 가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에 따르면, 통일 후 남북 병력 감축으로 약 133만명 이상의 생산가능인구
확보가 가능

군비 감축에 따른 재정효율성 증대

- 현대경제연구원(2010)에 따르면 통일 시 국방비 절감효과는 2013년~2050년까지 누적 총
1조 8,862억\$
- 국방비 절감효과는 연구별로 최소 246조원(조동호, 1997)~최대 1조 8,862억(현대연구원, 2014)
까지 편차

노동 생산성 향상에 따른 산업 생산성 증대

- 통일 후 북한의 노동 생산성 102.9% 증대 예측(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신용등급이 상향되는 통일한반도(조선일보, 2014.1.6)

- 현재 남한 대북리스크로 신용등급 평균 2등급 하향화
-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회사는 “남북 통일 후 5년 안팎으로 국가 신용등급은 한두 단계 이상
오를 것”이라고 전망
- 통일로 한국 신용등급이 인상되면 이자비용이 크게 감소하여 재정적 효율성 증대

고용 창출

- 국회예산정책처(2014)에 따르면 통일 후 40년간 연평균 65만 6천명, 총 2,953만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
- 한국정치학회(2014)는 통일 후 10년간 연간 119만명, 총 1,190만명 취업유발효과를 예측
- 통일 후 북한 3차산업 발달은 360만명의 고용창출효과 유발(통일연구원, 2014)

2,600만 관광대국(조선일보, 2014.1.14)

- 현대경제연구소(2014)에 따르면 통일한반도에는 매년 2,600만 이상의 관광객 방문 예상
- 관광객 유입을 통해 약 60만명의 취업유발효과도 발생

자원 대국, 통일한반도

- 지하자원 국내 조달로 연간 153.9억\$ 절감 효과(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통일한반도의 안보적 편익 : 안보불안의 근본적인 해소**통일한반도의 인도적 편익**

- 이산가족 문제의 해소
- 북한주민 인권 문제의 해소
- 냉전 청산으로 인한 사회갈등비용 절감액은 188조원(조선일보, 2014.1.6)

통일한반도의 문화적 편익

- 현대경제연구원(2014)에 따르면 2050년 통일 시, 유네스코 등재 문화재는 통일 전 10건 (세계 21위)에서 12건 이상(19위)으로 상승될 것으로 예측
- 현대경제연구원(2014)에 따르면 2050년 통일 시, 하계올림픽에서 세계 5위 이내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측

통일의 국제적 편익**통일한반도·중·일·러 동북아경제공동체 탄생**

- 조선일보·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에 따르면, 2040년 동북아 경제공동체는 NAFTA, EU를 제치고 세계 1위 경제권으로 발전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탄생

-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통해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형성

안보적 편익 :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

- 한반도 통일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출발점

규범·문화적 편익

- 통일은 민주주의와 복지, 인권 등 인류보편적 가치 확산에 기여
-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출발점이자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관문으로 사람, 물자, 문화가 융합되어 동아시아 신문화공동체 건설의 주역이 될 것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한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정책 안건의 예 -

한-유럽간 대륙철도 증설 10개년 계획

백두산 관광 자원 개발단 선발 정책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서의 평양 유엔사무국 운영 정책

동북아 농업시장 발전을 위한 농축산업 지원 정책

**정책 주제는 모의국무회의 개최의 목적을 담고 있으며,
정책 심의 및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핵심이 됩니다.**

③ 직책 부처 설정하기 (국무위원)**TIP5**

현 정부의 주요 직책 부처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 선정된 주요 정책에 합당한 부처를 선정하기 쉬워집니다.

- 구성된 팀의 인원과 국무회의에서 다룰 정책 주제가 결정되면 팀의 인원과 정책의 특성에 맞는 직책 부처들을 설정합니다.
- 팀 구성의 최소 단위는 대통령을 포함하여 6개의 부처입니다.
- 부처는 기획재정부 / 국토부 / 통일부 / 법무부 / 외교부 / 문화체육관광부 / 고용노동부 / 환경부 / 국방부 / 보건복지부 / 교육부 / 여성가족부 / 해양수산부 / 미래창조과학부 / 안전행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등이며 직책 부처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현재의 정부 구성을 기본으로 하지만 통일 1년 후의 가상에 따라 직책 부처명은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하며 변경할 경우엔 현재의 부처 이름을 병기합니다.
- 중요도에 따라 현 부처의 업무를 분리하여 독립시키거나 신설 부처도 창설할 수 있습니다. (예- 통일환경개발부, 통일문화융합부 등)

④ 각 팀원의 수행 직책 결정하기 (역할 나누기)**TIP6**

팀원들의 성격과 재능을 고려하여 각각의 수행 직책을 결정하면 훨씬 흥미롭고 사실적인 모의국무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정책 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역할을 나눕니다.
- 각 정책 부처의 목적과 성격을 자세하게 조사합니다.
- 영상, 음향 효과를 활용하여 각각의 특성에 따라 수행 직책의 임무를 표현합니다.

⑤ 담당 수행 직책별로 선정 주제에 대한 부처별 안건을 작성**TIP7**

각자 발표할 정책을 안건으로 정리하면 토론 쟁점을 찾고 대본을 작성하는 데 용이합니다.

- 선정한 주제의 주무부처는 간략히 모의국무회의의 안건을 작성합니다.
- 주무부처가 아닌 부처라도, 해당 안건에 관련된 입장이 있다면 그 부처의 입장까지 담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목차에 ‘유관부처 협의 결과’ 등의 목차로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1개의 안건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을 주무부처가 총괄하여 정리, 안건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 안건의 분량은 8~10페이지 이상으로, 현재 상황, 통일 후 1년 동안 해당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정책추진 원칙 및 고려사항, 대응방안 등을 담습니다. 이 목차는 예시일 뿐, 자유롭게 작성하여 정책과 관련한 제언을 담으십시오.
- 작성한 안건은 대본에 ‘요약’으로 수록하여 (2페이지 내외) 함께 제출하십시오.

⑥ 부처간 토론 쟁점을 찾아내어 갈등과 대립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 선정된 정책 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연관성과 현실적인 문제점을 모색합니다.
- 정책 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구성합니다.
- 한 가지의 정책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다른 부처 간의 갈등과 대립이 치열해지기도 합니다. 직책 부처마다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검증된 객관적 사례로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설득력 있는 눈빛과 호소력 있는 제스처를 적절히 사용합니다.

⑦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의 안건에 대한 정책을 의결하기

- 각각의 부처별 의견과 주장, 갈등과 대립들을 유지시키면서 토의 안건에 대한 정책 결정을 도출하며 긍정적으로 방향을 제시하여 줍니다.
- 의결된 정책이 모의국무회의의 기본 목적과 세부 사항에 잘 융합될 수 있도록 통일된 구성을 기획합니다.

4. 대본 작성 요령

① 대본 작성을 위한 기획 회의하기

TIP8 대본 전체 구성이 탄력적이어야만 모의국무회의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대본 작성을 위해 각 수행 직책별 의견과 주장을 취합합니다.
- 최대 4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몇 개의 안건, 혹은 몇 개의 장면(Scene)으로 모의국무회의를 연출할 지를 토의합니다.
- 대본의 전체적인 흐름은 서론(정책 배경), 본론(정책 심의, 토론), 결론(정책 의결, 결정)을 전제로 합니다.
- 정책 주제의 도입, 정책 주제에 대한 부처별 토론, 정책 주제에 대한 각 부처별 갈등과 반론, 협의, 의결을 위한 대단원으로 구성하여 정책 결정을 도출합니다.
- 기획 회의를 마무리하고 대본 작성을 시작합니다.

② 대본 작성의 개요 정하기

TIP9

서류 전형 후 예선 참가를 위해 연습과 훈련을 거듭하면서 보다 세련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본에 약간의 수정·첨가는 할 수 있으나 정책 주제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1개의 정책 주제로 예선과 결선을 진행하며 결선에서는 의결된 정책을 발표하고 팀 간 정책 검증 및 논쟁 방식으로 경연대회를 진행합니다.

- 표지와 내지를 구분합니다.
- 표지에 담을 내용과 내지에 담을 내용을 구성합니다.
- 표지를 포함하여 8~10페이지 이상으로 모의국무회의의 대본을 만듭니다.
(대본 규격의 예 - A4 / 10~11pt / 행간 160 / 상·하 여백 20mm / 좌·우 여백 25mm)
- 대본에는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해 각 국무위원들의 행동, 표정, 몸짓 등의 표현을 기입합니다.
- 음향이나 영상물이 제시되는 장면이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 요약본 (2페이지 이내)의 주요내용을 붙임으로 첨부합니다.

③ 대본 구성 양식

표지 기재내용	내지 기재내용	요약
제목 통일, 그래서 더 행복한 대한민국!	등장인물 수행 직책 및 팀원 이름	주요 내용 요약
주제 모의국무회의의 정책 관련 주제	Chapter 각 Chapter별로 국무회의의 대본 구성 화면의 영상이나 음향, 등장인물의 행동 등도 기재	
팀명 및 팀 대표 이름 팀 대표 연락처 및 제출 날짜	페이지 기재	
[표지] - 1페이지	[내지] - 8~10페이지 이상	[요약] - 2페이지

표지 샘플

통일, 그래서 더 행복한 대한민국!

<제3회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대본>

토론 안건 :

팀명 및 팀 대표 이름 :

연락처(H.P) :

년 월 일

내지 샘플

<제3회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대본>

- 제목 :
- 안건 :
- 등장인물 (직책부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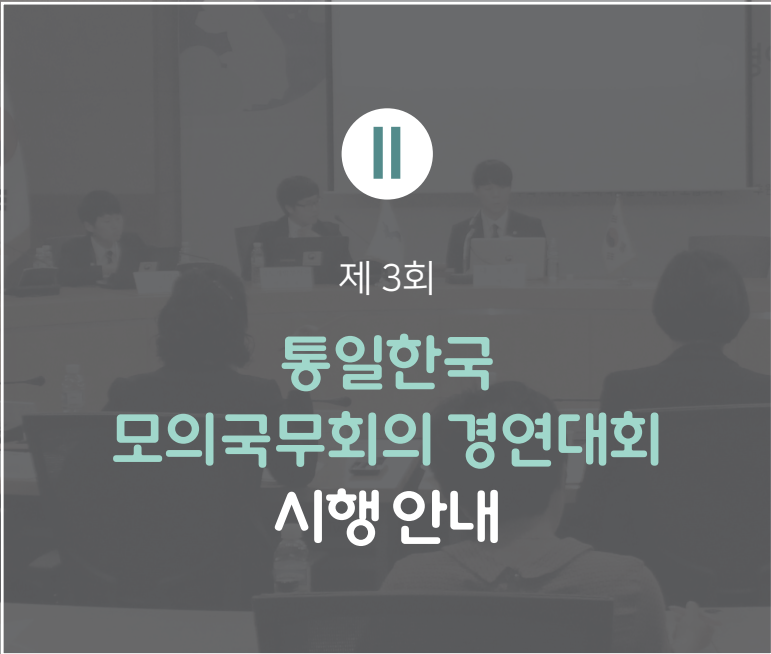
· Chapter 1

- 필요에 따라 Chapter와 Scene별로 대본을 구성합니다.

통일교육원 발간 참고자료

모든 자료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구분	자료명	발간연도	주요내용	대상
기본교재	통일문제이해(7장)	매년 발간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주변정세의 변화와 통일환경,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남북관계의 전개, 통일미래의 비전과 과제를 설명	교사 및 일반인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	2011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 필요성의 논리를 재정립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 방안과 과제	2012	남북경제공동체의 개념과 형성과정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구체적 실행방안 모색을 통해 경제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제고	
	한국과 독일, 분단과 통일 이야기	2012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관련 역사적 현상이나 상징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통일과 분단의 의미 조명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2011	통일비용·분단비용·통일편익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다양한 통일편익을 제시	
영상자료	독일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2009	독일의 통일과정과 통일이 된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분야별 통합현황을 알아보고,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파악	고등학생 및 일반인
	대륙열차	2013	선조들이 독립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닦던 시베리아횡단열차를 소개하고 통일은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제시하는 영상	
	통일 꼭 해야 되나요	2012	중학생 눈높이에서 분단비용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통일이 되면 분단비용이 사라지고 다양한 통일편익이 발생함을 설명	
	통일창업 위대한 벤처	2012	중학생 눈높이에서 분단비용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통일이 되면 분단비용이 사라지고 다양한 통일편익이 발생함을 설명	
	우리의 선택은 통일입니다.	2012	통일비용, 분단비용, 통일편익 등을 설명하고 통일 미래 비전 및 통일에 가까워지는 방법 소개	
	분단에서 통일로	2012	고등학교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분단의 원인과 폐해, 우리의 통일노력, 통일 미래 비전 등 분단과 통일 문제 설명	
	통일, 미래를 위한 약속	2012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통일의 비용과 편익 등에 대해 설명하고 통일 미래의 비전과 준비 과제 제시	
	세 친구의 1박 2일	2012	중학생 눈높이에서 분단의 원인과 폐해, 우리의 통일노력, 통일 미래 비전 등 분단과 통일 문제를 1박 2일 형식으로 현장감 있게 설명	





제 3회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의 경연대회 시행 안내

주최 :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 후원 : 통일부(통일교육원)

1. 목적 및 개요

통일한국 미래리더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모의국무회의의 경연대회는 통일 이후 한국사회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변화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신한 상상력을 키우고, 그로부터 도출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마당입니다. 이러한 모의국무회의의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학생 세대에서 통일과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 통일이 가진 의미에 대해 관심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시행 주제

통일, 그래서 더 행복한 대한민국!

3. 시행 내용

남북통일 이후 1주년을 가정하여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상을 상상하여 평가하고 통일편익 극대화를 통해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하여 모의국무회의를 통해 시연한다.

- 참가 자격: 전국의 대학, 대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대학생
-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홈페이지(www.kaurinu.or.kr) 혹은 통일한국모의국무회의의 카페(<http://cafe.daum.net/unifi2016>)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한 후 참가신청서(기획안과 팀 소개, 팀원 명단 포함), 모의국무회의의 대본 (40분용)을 작성하여 kaurinu21c@gmail.com으로 메일 접수한다.
- 참가비 없음 (단 교통 및 숙박 비용 지원 없음)
- 팀은 최소 6명에서 최대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 수행 직책은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장관 가운데 대통령 1인 포함 5개 부처 이상의 장관들이 각 부처별 의제와 정책들을 발표한다.
- 부처 선정은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현재의 정부 구성을 기본으로 하나 부처명의 경우 통일 이후 1년이 라는 컨셉에 따라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부처 명을 현재의 부처 명으로 병기한다.)
- 대본은 1개의 정책 주제를 선정하여 40분간의 국무회의의 시연 내용으로 준비한다.

4. 시상 내역

최우수상 1팀 : 상금 200만원 및 통일부장관상
부상 - 팀 전원 해외연수(5박 6일)

우수상 1팀 : 상금 150만원 및 통일교육원장상

장려상 1팀 : 상금 100만원 및 통일교육원장상

5. 심사 기준

소재의 참신성, 자료 준비 및 활용도, 미래통일정책에 대한 공헌도, 의사소통능력, 국무회의의 목적 달성도, 자세 및 팀워크 등

6. 대회 일정

- 3월 27일 ~ 5월 15일 : 신청 접수 (5월 15일 24시 이메일 신청 접수 종료)
- 5월 16일 ~ 5월 18일 : 서류 심사 진행 / 9개 팀 1차 선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5월 20일 : 예선(오후 13시 30분~) - 팀당 40분간 진행 (9개 팀 경연 후 3개 팀 선정)
- 5월 27일 : 결선(오후 13시~) - 팀당 15분간 발표 후 3개 팀 정책토론 토너먼트를 진행

예선 (5월 20일 토요일)

* 예선 장소 : 통일교육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

일정	시간	내용	비고
5 / 20 (토)	13:30 ~ 13:50	예선 오리엔테이션 및 순서 추천	
	14:00 ~ 14:40	A조 발표 (서면심사 통과 3개팀)	* 3개팀을 1개조로 구성, 3개조가 3곳의 장소에서 경 연 진행
	14:50 ~ 15:30	B조 발표 (서면심사 통과 3개팀)	
	15:40 ~ 16:20	C조 발표 (서면심사 통과 3개팀)	
	16:20 ~	심사위원 평가 취합 및 협의, 결선진출 3개 팀 선정	* 각 조의 1등팀을 선발하여 최종 3개팀 결선 진출

결선 (5월 27일 토요일)

* 결선 장소 : 지지향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일정	시간	내용		장소
5 / 27 (토)	13:00 ~ 13:20	결선 오리엔테이션 및 순서 추천		
	13:20~ 14:25	1부 (정책발표)	정책 발표	A,B,C 팀 15분씩 정책 발표 (발표 방식 : 대통령 모두발언-각 정책부처 발언-의결된 정책에 대한 총론)
	14:35~ 15:20	2부 (정책토론 및 검증)	팀 간 지정공격 및 방어 (10분)	각 팀 대표(3명씩) 출전, 상대 팀 발표 정책에 대한 반론 및 대응 (A팀 :B·C팀 공격, B·C팀 대응 및 방어 B팀 : A·C팀 공격, A·C팀 대응 및 방어 C팀 : A·B팀 공격, A·B팀 대응 및 방어)
			작전 타임 (2분)	팀 의견 정비 및 자유 토론 전략 수립
			자유공격 및 방어 (20분)	각 팀 대표 전원 자유논쟁. 상대 정책의 오류 및 허점 공략,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대응 및 방어
			방청객 QnA(5분)	방청객이 토론에 참여하여 결선 팀에게 질의문답
			작전 타임 (2분)	팀의 최종 변론 정리를 위한 준비
			최종 변론 (6분)	상대 팀에 대한 반론 포함, 자신의 팀에 대한 강점 및 타당성 전달, 감성에 호소할 수도 있는 스피치 능력 표출
	15:30~ 16:00	통일 토크 콘서트 * 사전에 참석자를 대상으로 질문지 접수 *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랜덤으로 추천하여, 질의응답 진행		
	16:10 ~ 16:40	심사 발표 및 시상		

7. 문의

전화 : 02-6053-2001 <제3회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사무국>
전자우편: kaurinu21c@gmail.com
통일한국모의국무회의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unifi2016>

<붙임1>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대통협) 현황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개요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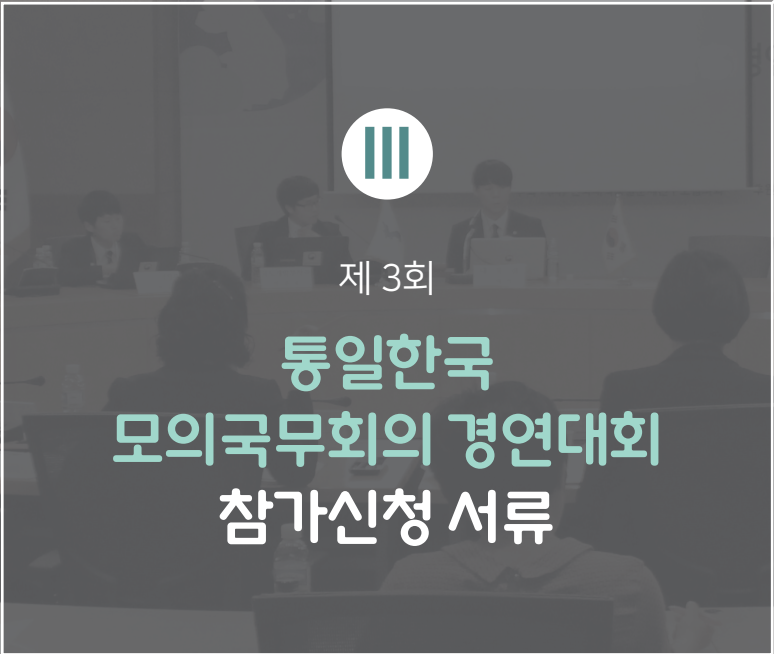
- '83.8.27 북한 통일관련 학술행사 개최 등 대학통일문제연구소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창립(초대회장 : 민병천(동국대), 85개 대학연구소 참여)
 - '09.2.4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로 명칭 변경
 - '10.11.16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설립 등기
 - '12.2.9 유호열 협의회장 취임
 - '15.2~현재, 김태일 상임대표 취임(現在 75개 대학, 82개 연구소 가입)
- ※ 역대 회장 : '05년 노태구(경기대), '06년 이서행(한국학중앙연구원), '07년 우성대(목포대), '08~'11 김연철(한남대), '12~'14 유호열(고려대), '15~현재 김태일(영남대)

협의회 개요

- 설립일자 : '10.11.16('15.2~현재, 상임대표 : 김태일)
- 설립목적 : 민간차원에서 대학생과 시민의 건전한 통일교육, 통일문제에 관한 학술 연구 및 학문 교류와 정책 개발을 통하여 통일학 정립과 통일정책 발전에 기여
- 주요사업
 - 대학생 및 시민의 건전한 통일관 정립을 위한 교육
 - 통일정책의 연구와 건의
 - 연구 발표 및 토론회 개최
 - 연구소 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협의

임원진 명단

보직	성명	소속	보직	성명	소속
상임대표	김 태 일	영남대학교	고문	강 성 윤	동국대학교
공동대표	전 동 진	신라대학교		김 연 철	한남대학교
	김 재 한	한림대학교		유 호 열	고려대학교
	김 창 희	전북대학교	감사	진 희 관	인제대학교
	남 궁 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무총장	김 정 수	영남대학교
	박 명 규	서울대학교	사무국장	윤 선 진	영남대학교
	이 수 훈	경남대학교			
	김 학 성	충남대학교			



(2016년 샘플 포함)

1. 참가신청서 양식

제3회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의 경연대회

참가신청서

1. 팀 소개 및 팀 대표 인적사항

팀명	
소속	(소속 대학, 학과 및 동아리명)
팀 소개	(300자 내외)

팀장 성명		생년월일	
소속	(소속 대학, 학과 및 동아리명)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2.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의 경연 기획서

<경연주제>

* 모의국무회의의 참여 동기와 경연주제, 문제의식과 기획의도 그리고 경연에서 발표할 주요정책 등을 기술

* 필요시 자유 형식으로 별지 사용 가능, 별지 사용 시 주제만 기술 후 A4용지 2매 이내로 별도 문서 파일을 첨부

위와 같이 제3회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의 경연대회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사인)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귀중

3. 팀원 명단 및 정보

No.	이름	학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역할 부처 (부처명 변경시 현행 부처명 병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 대본 기획서 샘플 (2016년 최우수상 팀의 예)

안건. 동북아 농축산업 6차화 추진 방안

I. 추진 배경

- 1.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결로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부상한 통일 한국
- 2. 국제적 영향력을 확보할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주도권 확보
- 3. 국내의 곡물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식량 안보 위협
- 4. 이북과 이남지역 간 경제적 격차 심화로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 증가
- 5. 동북아 경제 협력으로 공동체 의식 제고

II. 추진 계획

- 1. 동북아 농장 단지 건설



가. 랴오닝성에서 박천평야로 이어지는 벨트 1

나. 연해주에서 나진으로 이어지는 벨트 2



벨트	지역	면적 (1,000ha)	사업비 (억 원)
벨트1	랴오닝성	100	400
	박천평야	20	80
벨트2	연해주	200	2,400
	나진	5	20

2. 동북아 농장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이용하여 식품가공업 육성
- 가. 동북아 농장과 인접한 신의주, 나진 지역은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 중심
 - 나. 태평양과 육로를 연결하는 원산 지역은 일본, 미주 등에 대한 주력 수출 상품 중심
 - 다. 원산은 농, 수, 축산물 가공업과 수송에 모두 유리한 수출 거점



3. 미래지향적 '창조농축산업' 진흥
- 가. 동북아 브랜드 NAPAP 농축산업 엑스포를 개최
 - 나. 동북아 농장단지, 농촌관광을 활성화
 - 다. 종자개발 등 농축산업 연구와 기술혁신을 지원

III. 기대효과

1. 동북아 르네상스의 마중물
 - 가. 농업에서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동북아 경제 협력의 물꼬를 튼,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등장
 - 나. 1, 2, 3차를 망라하는 전 산업구조적 사업으로, 모든 산업에 혜택
 - 다. 랴오닝성의 유휴지와 침체된 연해주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균형 발전에 기여
2. 통일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 증대
 - 가. 동북아 르네상스의 시작인 농축산업 협력 단계에서부터 통일 한국식의 새로운 성장 모델 제시
 - 나. 시장 개방과 자동화로 소규모 농가 몰락은 세계적 추세
 - 다. 6차산업화로 농가를 살림과 동시에 기타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3. 통일 한국의 신성장 동력
 - 가. 경제영토의 실질적 확장으로 식량 안보 확보
 - 나. 원료, 제조, 서비스까지 전 산업 라인을 보유하여 혁신 역량 증진, 창조 경제의 원천
 - 다. 토지의 효율적 분배와 사용
4. 균형과 사회 통합
 - 가. 농가 소득 향상을 통한 도시 농촌 간 소득 불균형 개선
 - 나. 관광업 진흥을 통한 농촌 지역 일자리 창출
 - 다. 남북한 불균형 개선

IV. 참고사항(유관부처)

1. 국토교통부

- 가. 농장 단지 건설 부지 선정의 타당성 조사 결과 벨트 1, 2는 실효성이 떨어짐.
 라오닝성과 연해주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
- 나. 농장 건설에 필요한 인프라와 자금 지원할 것임
- 다. 유라시아 물류벨트와 가공기지 잇는 철도 간선 확장

2. 환경부

- 가. 라오닝성에 농장 단지 건설 시 황사 피해 저감을 위한 방풍림 조성이 중지될 것을 우려
- 나. 연해주 지역에 농장 단지 건설 시 생물다양성 저해 우려
- 다. 식품가공업으로 산업 폐기물 발생 우려

3. 산업통상자원부

- 가. 동북아 벨트 원스탑 센터 운영
 - 기업에 정보제공, 컨설팅, 교육, 홍보
 - 동북아 산업 투자지원단으로 경제협정들 사이의 혼란 해소
 - 농업벨트 관련 설명회와 바이어 초청회로 민간 기업 투자 유치 극대화
- 나. 외국인 투자구역 조성

4. 외교부

- 가. 연해주 지역에 농장 단지 건설 시 생물다양성보존 아젠다 주도권 상실
- 나. NAPAP 농업 엑스포 개최 홍보, 참여 유치

5. 기획재정부

- 가.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재원 마련의 국비 진행이 효율성이 떨어질 시 민영기업 진출을 모색, 법인세 인하 및 부가 혜택 제공 기틀 마련
- 나. 기존 '국토의 균형적인 도시개발 사업' 과 관련하여 위 산업이 해당 되는 지역의 시, 군, 구 지역 재정 교부 방식과 다른 특별 재정 교부로 사업의 효율 도모
- 다. 농축산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충분한 자립성 판단 될 시, 보조금 축소 및 잉여농산물 매입의 최소화
- 라. 농촌 관광 진흥 사업과 관련해 기존 농축산부에서 해오던 '그린 투어리즘' 을 재조명해 농축산부의 예산 낭비 방지를 요구, 이와 관련해 사업 재정 운영 방식에 있어서의 문체부와와의 협조 요청

6. 교육과학기술부

- 가. 기술 스타트업이 제품 판로 확보, 기술 수출 -> 창업 선순환
- 나. 바이오뷰티와 식품가공업단지의 협력

7. 문화체육관광부

- 가. 농촌관광 진흥원 설립하여 지역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마련
- 나. 1,2,3차 산업으로서의 농업 아우르는 문화 프로그램
- 다. 환경적 조건에 따라 레저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8. 통합행정자치부

- 가. 도시와 농촌 간 소득의 불균형 해소할 것
- 나.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여 농촌 고령화와 공동화 저지

3. 대본 샘플 1 (2016년 최우수상 팀의 예)

동북아 新 성장동력, 통일한국!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의 경연대회
대 본

- 토론 안건 : 동북아 농축산업 6차화 추진 방안
- 팀명 및 팀 대표 이름 : 통통배 대표 김지원
- 연락처(H.P)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안건> 동북아 농축산업 6차화 추진 방안

S#1. 개회 선언 및 국민의례

대통령 정도영:

(모두를 향하여) 18명 구성원 중 11명이 출석하여, 개의요건인 구성원 과반수 출석을 충족하였습니다. 제25회 국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국무총리가 공식적인 일정이 있어 부재하므로, 통합행정자치부 장관이 대신 국민의례를 진행해주십시오.

통합행정자치부 하원조 장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난다. 음악이 나온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한반도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통일한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통합행정자치부 하원조 장관: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재생)

통합행정자치부 하원조 장관: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는다.)

S#2. 대통령 모두발언

대통령 정도영: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우리가 통일을 이룬지 꼭 5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히 이번 5월은 통일 5주년 기념일을 맞아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 들을 모셔 기념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통일 한국의 존재와 위상을 더욱 공고히 드러내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통일이 된지 5년이 지났고, 제가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시작한지도 이제 4년째입니다. 통일 과업을 달성했다는 행복을 느낄 새도 없이, 여기 계신 모두가 통일 직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통일을한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신(新)성장'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각 부처 간의 협업행정을 통해 성과를 이뤄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 이후 예상치 못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고, 기대했던 것만큼 주변 국가들의 도움도 얻지도 못했습니다.

통일한국이 비상하여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공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밝혔던 동북아 신(新)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제시된 이번 '동북아 농축산업 6차화 추진 방안', 및 '평화허브국가 도약 방안'은 매우 기대되는 정책입니다. 이미 부처 별로, 또 특정 부처 간에 상당한 수준으로 업무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압니다.

아 그리고,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미리 기획서도 읽고, 주무부처 장관에게 대면보고도 받고 나서 통일의 편익이 참으로 크다는 생각이 새삼 다시 들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이와 같은 눈부신 편익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교육했다면 더욱 통일이 빨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과거 우리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자조하고, 또 어른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때 통일의 편익을 교육했다면 전 국

민이 하나 되어 통일을 바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모두 발언이 다른 때보다 길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S#3. 안건1. 동북아 농축산업 6차화 방안-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 정도영:

첫 안건은 동북아 농축산업 6차화 추진 방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백인하 장관:

안녕하십니까, 백인하 장관입니다. 저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축산업을 동북아 시아의 미래 신 성장 동력으로 삼는 "동북아 농축산업 6차화 추진 방안"을 제안합니다. 남북통일로, 한국은 유라시아로 나아가는 동북아의 물류 중심이 되었습니다. 동북아 농축산업 6차화 추진 방안은 이 물류로를 심분 활용, 한반도의 궤기를 꺾고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동북아의 신 성장 전략입니다.

농축산업의 6차화란 1차 산업인 농장과 2차, 3차 산업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에 기반 한 2차, 그리고 1차와 2차를 활용한 3차 산업 일체를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창조적 전략입니다. 그럼 그 구체적 사업을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나누어 소개하겠습니다. 동북아 농장단지 건설, 식품가공업 육성, 그리고 창조농축산업 진흥사업입니다.

첫째, 동북아 농장단지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본 추진방안의 2차, 3차 산업 사업을 뒷받침할 가장 핵심 사업입니다.

또 농축산물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동북아의 식량 안보, 식량 자주율을 높일 국가 기간 사업이기도 합니다.

농장단지는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인접국가와의 공동개발로 건설될 것입니다. 먼

저, 벨트 1은 중국과의 공동개발단지로 랴오닝성에서부터 국내 박천지역까지입니다. 위 부지는 이미 농업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고, 노동력도 풍부해 총 사업비가 4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미 랴오닝 성에 거대한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부지인 한-중 국경지역에는 유휴지가 많았습니다. 이에 랴오닝 대농장의 관개시설 및 농업 인프라를 동북아 농장단지까지 확대 매설하겠다는 등 계속해서 적극적인 협력안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벨트 2는 러시아와의 공동개발단지로 연해주에서부터 국내 나진-선봉지대까지입니다. 위 부지는 열악한 인프라 시설과 부족한 노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제반 비용으로 24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과거 푸틴 대통령 시절부터 극동개발부를 운영하는 등 극동지역 개발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러시아와 통일한국이 서로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사업 진행이 수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장단지에서 확보된 농축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업 육성안입니다. 동북아 농장단지와 가까우면서도 노동력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세 곳을 식품가공업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각각의 동북아 농장과 인접한 용천, 나진 가공중심지에서는 각 농장 주요 생산물에 특화된 쌀, 옥수수 식품가공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 육로와 태평양의 연결점인 원산에는 일본 및 미주 지역 주요 수출품에 특화된 가공업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원산은 동해로부터 신선한 수산물, 인근의 세포 등판으로부터 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등 물류 허브로서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제반 시설을 기반으로 이 번 안건의 꽃, 창조농축산업 진흥을 위한 개발 전략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NAPAP 지금부터 모두 이 단어를 주목해 주십시오. 궁극적으로 동북아 농축산업 공동개발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상품을 NAPAP이라는 브랜드로 런칭할 계획입니다. 일관적인 브랜드를 내세워 소비자가 쉽게 해당 브랜드를 인식하고, 또 신뢰를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공적으로 브랜드가 안정권에 접어들다면, 이를 바탕으로 매년 한, 중, 일, 러 지역에서 NAPAP 엑스포를 순환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환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축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면 날수록, 농촌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드넓은 동북아시아의 농촌 지역의 특색을 살려 농촌 관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북아 4국이 농촌 관광 지원 기관을 만들어(동북아창조농업센터)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구축해 놓을 계획입니다. 특히 일본은 일찍부터 농촌 관광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해 왔는데, 지난 장관회의에서 농촌관광에 대한 노하우를 한, 중, 러에 공유해 주는 것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기후와 식생의 동북아 농촌지역은 세계 각국에서 찾는 지역 균형 개발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1,2,3차 산업이 함께 있다는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동북아 전역에서 종자개발과 기술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한 농축산업을 진흥시키겠습니다.

동북아 경제 협력의 길, 동북아의 신 성장 동력은 바로 농축산업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농축산업을 바탕으로 동북아 4국이 공존하는 동북아 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S#4. 국토교통부 제언

국토교통부 조문호 장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조문호 장관입니다. 통일후 저희 국토부의 주도로 한반도 중단철도가 개통되었습니다. 개통 이후로 유라시아로 통하는 교통망이 연결되었지만 현재까지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 방안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동북아 농업단지 건설 부지선정에는 이의가 있습니다. 저희 국토교통부는 동북아 농업단지 건설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의뢰해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랴오닝성, 연해주 중심의 농업단지를 박천평야, 나선지역까지 확장하는 방식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히, 두 농업단지 면적 중 국내 지역의 농지 면적이 크지 않고, 가늘고 길어지다보니 생산과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지도를 보여 주며) 부지 선정이 이렇게 조율되기만 한다면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농장에 필요한 관수시스템을 비롯한 기반 인프라연결사업과 가공기지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해외농장 개발 홍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주최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며 해외건설특화펀드를 적극 활용하여 건설사들의 자금 부담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백인하 장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국토부의 지도를 보며), 국토부가 동의하는 지역부터 사업을 진행해 협조를 받고, 나머지 국내 박천 평야와 나진 지역은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하지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식량 자급률 문제와 국내 농가의 사정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부지 선정에 이의 없습니까?

S#5. 랴오닝성 지역 선정에 반대

환경부 김기민 장관:

환경부 김기민 장관입니다. 부지 선정에 이의 있습니다. 랴오닝성 단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랴오닝성 남단은 중국 및 몽골 발 황사의 70 퍼센트가 지나가는 곳으로, 저희 환경부가 황사 피해 저감 핵심지로 선정하여 지난 2001년부터 방풍림 조성 사업을 해온 곳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 농장을 건설하면 상당수의 우리 국민이 이주해 갈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이 지역은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곳입니다. 국민의 환경권을 책임지는 환경부에서는 이 점을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선정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선정은 장관입니다. 저희 산업통상자원부도 랴오닝성 부지 선정에 대해 환경부와 같은 입장입니다. 환경부가 2023년 관계부처와 합동해 보도한 황사 피해방지 종합대책 보도자료에 의하면 황사에 따른 산업피해액은 이미 연간 5조 5천

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해외 농장 건설로 환경부의 랴오닝성 방풍림 조성 사업이 중단될 경우 황사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미 황사로 인해 항공기의 결항이 잦아지고, 철도의 유지보수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제품 불량률도 높아지는 등 이미 산업피해가 큼니다. 기업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할 산자부로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백인하 장관:

아. 황사 방풍림 조성이 문제가 되는군요. 황사 문제라... (잠시 고민하다가) 네이멍구 자치구에도 방풍림 조성 사업이 활발하지 않습니까? 농장단지 수익의 5%정도를 그 사업에 투자하여 황사 피해를 줄이는 데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사업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랴오닝성이라는 지역을 선택한 것에 반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연해주 지역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것으로 봐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선정은 장관:

(동시에) 네

환경부 김기민 장관:

(동시에) 아니오

(두 장관 서로 쳐다본다.)

S#6. 연해주 지역 선정에 반대하는 환경부

환경부 김기민 장관:

환경부는 연해주 지역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 지역에 대규모 농장이 들어설 경우 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한국형 호랑이의 95%,

식물 1300여종, 이끼식물 300여종, 곰팡이류 1200종, 곤충 6000여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생물 다양성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외교부 장관님?

외교부 계승현 장관:

외교부 계승현 장관입니다. 환경부 장관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과거 한국정부는 1995년 생물다양성협약 가입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평창에서 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하는 등 국제 생물다양성보존의 흐름을 주도해 왔습니다. 또 통일로 보다 다양한 생물종을 확보하게 되어 생물다양성보존이라는 국제적인 어젠다 주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자 외교에서도 생물다양성보존은 협력을 다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테마입니다. 특히 러시아와의 외교가 과거에는 에너지 안보, 무역과 같은 1차적인 것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함께 생물다양성이라는 전 세계적 가치를 함께 수호하는 성숙한 관계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외교적 안건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 백인하 장관:

환경부, 외교부 장관님. 이 사업이 비단, 개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동북아 농업단지 건설은 통일한국의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S#7. 보조금 지급 및 민영화 건 논의

기획재정부 김의령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김의령입니다. 기재부는 본 사업에 대해 동의하며, 보조금 지급을 통해 농축산물의 생산량 및 가격 관리의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정부 주도하에 농축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써 지원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어느 정도의 자립성에 기반하여 시장 경제구도에 맞는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자금에 대해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충분한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참여 기업을 확대하고 민영화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축산물의 과잉 생산이 우려되는 경우 유럽 공동농업정책의 전례를 참고하여 생산물의 현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기존 정부의 잉여농산물 매입 방식을 최소화 하고 시장 가격 형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백인하 장관:

기재부 장관님, 협조에 감사합니다. 국내 농산물 생산량과 가격 문제도 문제지만, 식품가공업 단지 육성과 관련해서도 기재부의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으시다면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부 김의령 장관:

식품가공업 단지 육성에 필요한 자원 조달에 관해 말씀 드릴 것이 있는데요. 우선 민영 투자로 인프라 조성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철저한 회계감사와 경영 투명성에 대하여 확인 받은 기업에 한 하여 그 자격을 부여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위하여 해당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를 특정 기간 동안 인하고 부가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4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만큼 (산자부 장관을 보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서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대한 막기 위해 협력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철도의 연장 및 확장을 할 때의 사유지 개발에 대한 보상 방식과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계획안을 (국토부 장관을 보며)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제시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재부는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도시에서의 사업 효율성을 위하여 지방 재정 교부와 별개로 특별 재정 교부를 통하여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며 비장하게) 2015년에 발간된 KDI 연구 자료에 따르면 농업부문의 기술 개발을 통한 구조 전환은 거시적 관점에서의 경제 발전과 정의 관계에 있습니다. 추가 협력이 필요하다면 계속 협조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조문호 장관:

현재 이북 지역의 토지에 대한 총괄적 관리는 저희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보상 문제는 '토지 개발 관리법' 2조 3항에 의거 원 소유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가공지구와 기존 철도를 잇는 간선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선정은 장관:

저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기업들과, 해당 지역 진출 희망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컨설팅, 교육, 홍보를 목적으로 한반도 무역투자진흥회와 함께, “동북아 벨트 원스탑 센터”를 운영 할 계획입니다. “동북아 벨트 원스탑 센터” 내에는 4국과 연계한 동북아 산업 투자지원단을 신설하여 해당지역 국가들이 가체결한 양자 및 다자 경제 협정, 예컨대 FTA, RCEP, TPP와 농업 벨트 내에서의 새로이 체결 될 경제 협정 사이에서 올 수 있는 기업들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울 것입니다. 또 농업 벨트 관련 설명회와 바이어 초청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해당지역으로의 민간 기업 투자 유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자부는 UNI-KOTRA와 함께 농업벨트 내의 외국인 투자 구역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구역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며, 벨트내로의 안전한 자본 유입, 일자리 대거 창출, 외국 기업의 선진 기술 이전 등을 통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 강도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을 글로벌 체력을 가진 기업으로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부 김기민 장관:

식품가공업 육성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통일 한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을 상기하여 주십시오. 식품 가공업은 막대한 가공 부산물, 즉 산업 폐기물을 발생시킵니다. 농식품부에서 제출하신 안을 보았는데, 가공업의 예로 수출 효자품목인 김치와 홍삼이 포함 되어있더군요. 김치는 다듬는 과정에서 배추 세 포기 중 한 포기가 버려집니다. 또 홍삼은 엑기스의 10배에 달하

는 찌꺼기를 그대로 폐기해야 합니다. 이 남 지역만 하더라도 농, 축, 수산 폐기물 처리 지원비용 지급에 약 700억원의 처리 비용이 들어갔는데 (고개를 저으며)굳이 이런 산업을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선정은 장관:

환경부 장관님, 그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산자부 에너지산업정책단은 위와 같은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청정연료를 생산하는 기술개발을 주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상용화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위 공장들과 연계해 시범사업을 마치기만 하면 산업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로 화학공정이나 바이오공정을 수출하는 길도 열리는 겁니다. 미국 등이 생산하는 바이오에탄올보다 에너지 밀도가 20에서 30퍼센트 더 높아 경쟁력도 충분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김지원 장관:

(산자부 장관을 보며)산자부 장관님, 혹시 바이오부탄을 말씀하신 건 아니시겠죠? 그게 어떻게 산자부 사업입니까? 산자부는 국비만 낭비했지, 사실 상 저희 교과부가 과거 미래부 시절부터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 육성한 덕이 아닙니까.

(환경부 장관을 보며) 어쨌든 환경부 장관님, 환경 문제도 해결 될 테니 (한 음절씩 강조하며) 이 공장들 꼭 생겨야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창업 생존율이 가장 낮은 구간이라는 5년을 건넌 이 벤처들이 자기 기술을 사업화, 수출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창업 선순환 사례가 많아져야 우리나라가 더욱 창업 친화적인 나라로 도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기만 한다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산업 기회도 열리고 환경도 지킬 수 있습니다.

환경부 김기민 장관:

그건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있고 사업화 할 단계라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이 부산물들을 수집하여 한 곳에 대량으로 모을 수 있어야 한다는 보관 문제

가 남습니다. 바이오매스 대량 공급이 가능한 대형 가공업체만 사업 허가를 내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유통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정도영:

각 부처별 우려사항과 기대사항이 상이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의 편익에 대해서는 다들 동감하시는 것 같군요. 해당 사업의 효과와 편익이 크니 업무 상 유관부처간 잘 협의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창조농축산업 진흥에 특히 눈길이 갑니다. 농축산업이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라는 것이 잘 이해되는군요. 각 부 장관님들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8. 창조농축산업에 대한 여러 부처의 제언

통합행정자치부 하원조 장관:

통합행정자치부 장관 하원조입니다. 저희 부처에서는 특히 농촌관광사업의 소득 증대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에 관광 관련 서비스업 일자리를 창출하여 젊은 인구를 유도하여 농촌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자연스레 농가 소득을 증가시켜 도시와 농촌의 소득 불균형을 완화할 것입니다.

외교부 계승현 장관:

외교부 장관 계승현입니다. 저희는 특히 동북아 브랜드 농업 엑스포 개최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브랜드 농업 엑스포가 동북아 공동체, 그리고 이를 주도하는 통일한국의 위상을 높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도 국제적으로 엑스포 홍보와 참여 유치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류영주 장관:

문체부 장관 류영주입니다. 문체부에서는 농촌관광 진흥원을 설립하여 문화 융성 시대를 이끌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농촌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농가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지역 부존자원을 심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곡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밭음을 굴리며) 프랑스의 와이너리를 의미하는 샤또 (Chateau) 를 모델로 하여 곡물 수확, 전통주 제조, 시음과 주도 배우기 등 1차, 2차, 3차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모두 아우르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촌지역의 문화 부흥과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변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지역에서는 레저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목장지구인 세포등판 지역의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넓은 초지를 바탕으로 승마, 양치기 체험을 비롯하여 현장 체험 학습, 낙농업 체험 등을 기획하여 농업을 훌륭한 관광 상품으로 특화 시키겠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려면 농가 경영 컨설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등 교육 과학기술부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김지원 장관:

문체부에서 제안하신 방안을 포함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본 건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창조 경제 진흥에 정합하는 바, 타 부처 장관님들의 협력 요청이 아주 반갑습니다. 저희 또한 동북아브랜드엑스포 홍보에 대해 외교부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동북아브랜드엑스포는 농축산업 관련 기술 스타트업이 제품 판로를 확보하고 보유 기술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스타트업의 참가를 적극 지원해 기술을 조기 단계에 판매하고 투자를 유치, 연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동북아 농장-식품 가공업단지-벤처가 협력할 경우 실험을 위한 원재료의 안정적 조달 등 기존의 대기업만 가능했던 방식으로 가격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부터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육성 중이던 바이오 뷰티 벤처들은

기술 자체로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부산물을 대량 확보하는 것이 사업성 검토에 서 큰 비용을 차지, 사업화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감귤주스 부산물로부터 마스크팩용 소재를 추출하는 기술, 맥주 부산물로부터 로션에 들어갈 발아보리 소재를 추출하는 기술 등은 기술 자체의 특허는 등록했으나 사업 모델로 사업 전환이 불가능하던 상태인 데 위와 같은 벤처들과 식품가공업단지와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위 사업의 획기적 인 진흥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김의령 장관:

농촌관광을 진흥시켜 고용을 창출하고 관광 수익으로 지역 세수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재부 또한 문체부 장관님의 제언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농 식품부에서 2001년부터 추진해오던 '그린 투어리즘' 과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이라 고 해석되는데, (농식품부 장관을 살짝 노력하며)농식품부 장관님께서 먼저 다소 정제되어 있는 '그린 투어리즘' 을 수면 위로 올려 논의를 활성화 해주셔서 투입 된 예 산의 낭비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문체부 장관을 보며)문체부 장관님께서 농식 품부와 기존 사업과의 통합 재정을 두고 운영을 할지, 사업에 해당되는 각 지방 자치 단체 교부금으로 운영 할지 유연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류영주 장관:

그럼 문체부에서는 재정 관리의 효율을 위해 통합 재정을 통해 운영을 하도록겠습니 다. 대신 사업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재정 내의 새로운 항목을 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백인하 장관:

(끄덕 거리며)저희 농식품부에서도 그린 투어리즘과 관련하여 문체부와 연계하여 사 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부처 장관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동북아 농축산업 6차화는 동북아 지역을 엮고 통일한국이 이 공동체의 주도자가 되 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EU, NAFTA를 넘어서는 세계 1위 경제권과 그 리더 통일한

국, 그 중심에 동북아 농축산업 6차화 추진방안이 있습니다.

대통령 정도영: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고민해주시고 협력적으로 임해주셔서 든든하네요. 동북아 농 축산 6차화 추진방안이 동북아 신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S#9. 마무리 발언

대통령 정도영:

그럼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국무위원께서는 오늘의 안건에 대해 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고 잠시 후 스크린에 투표결과가 나타난다)

농림축산부에서 제안한 '동북아 농축산 6차화 추진방안'은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다른 때보다 국무위원님들의 헌신적이며 열정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 통일한 국, 나아가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또 다른 정책적 기틀이 마련된 것을 기쁘 게 생각합니다. 모든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유관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주십시오. '동북아 농축산 6차화 추진방안'의 효율적인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으로 제25회 국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대본 샘플 2 (2016년 우수상 팀의 예)

아시아 육상교통망 건설 계획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의 경연대회
대 본

- 토론 안건 : 아시아 육상 교통망 건설계획
- 팀명 및 팀 대표 이름 : UNI 대표 설지훈
- 연락처(H.P)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안건> 아시아 육상교통망 건설 계획

등장인물 : 대통령,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실장,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민안전부장관

S#5. 대통령 모두발언

정원철 대통령 :

지금부터 2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남과 북 분단의 쓰라린 세월을 끝내고 우리 국민의 염원인 통일을 이뤄낸 기념비적인 날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의 통일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바른 인식과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통일을 이룩한 주역, 국민 여러분의 노고에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원철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대한민국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분단된 남북이 국제사회에 분쟁과 불안요소였던 것에 반해 통일국가 대한민국은 책임 있는 선도국으로서 인류 번영과 화합에 역량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 육로 교통망'의 주도국가로서 아시아를 넘어, 유럽 두 대륙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립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지평을 열어야 합니다. '아시아 육로교통망' 건설은 국제사회 선도국으로서의 책임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낙후된 이북지역 개발에 활기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가 면밀하게 이뤄져야겠습니다.

지난 통일한국의 5년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니다. 이제는 국민의 통일에 대한 궁극적 기대에 정부는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남과 북의 생활수준 격차가 현저한 차이를 보임에 이를 개선하려는 첫 단계 노력인 '이북지역 에너지 자급 계획'을 통하여 거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끌어올릴 것입니다. 나아가 자급계획의 핵심, 재생에너지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산업으로 통일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에 대한 대승적 합의도출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반도 통일이 갈 길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남과 북의 격차를 해소하고 통일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국무위원님들과의 논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6. 국토교통부 장관 발표

정원철 대통령 :

첫 안건은 아시아 육상교통망 건설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해주시죠

국토교통부 이진주 장관 :

국토교통부에서 아시아육상교통망 건설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한반도는 대화와 호혜적인 협력·교류를 통해 점진적인 신뢰를 쌓아왔고, 마침내 통일을 이룩하였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달성한 이상, 이제 아시아 국가들과의 미 있는 협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신뢰를 구축할 차례입니다. 오늘날 동북아시아의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하며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고, 이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아시아육상교통망의 건설은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아시안 하이웨이와 아시아 횡단철도 건설에 참여하여 동아시아 교통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동북아의 중심지로서의 한반도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달성하는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첫걸음으로 국토교통부는 아시아육상교통망 구축을 제안하며 타 부처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본 계획실현을 위해 저희 국토교통부는 첫째, 한반도와 아시아 횡단철도를 잇는 가장 효율적인 노선을 우선 건설할 계획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하여 서울-평양-신의주 지역을 지나는 한반도종단철도 1(Trans-Korea Railway 1, 이하 TKR) 노선을 중국 선양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중국 선양지역은 중국횡단철도(Trans-China Railway)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rans-Siberia Railway)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시발점이 되는 곳입니다. TKR 1노선을 아시아 주요 철도 2개와 연결함으로써 한반도의 철도가 유라시아 모든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둘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an Initiative) 즉, GTI의 화물보관 및 운송

연계 시스템을 보충하여 동북아다자경제협회의 플랫폼 완성을 앞당기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여 년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연장선으로서, GTI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주요 분야별 다자간 협력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물류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2014년부터 러시아와 협력하여 나진-하산 철도를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하는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일이후 GTI의 지리적 이점이 명확해지면서 더 많은 사업체들이 입주하였고 물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였으며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늘어난 물류량을 감당하기엔 현재 운송시스템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상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으로 화물 터미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진항주변 철도 육상·해상운송시설과의 효율적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적 무역항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국토교통부는 아시아육상교통망을 통해 한국 과학기술과 ICT를 융·복합된 사업을 수출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려 합니다. 유라시아 교통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대다수 유라시아 국가들의 기술력은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어 각국은 인프라 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선진화된 한국의 공간정보인프라 구축경험을 기반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여 아시아육상교통망 관리를 위한 공간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유라시아 공간정보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계획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상기된 세부계획들을 통한 아시아 육상교통망건설은 2028 부산울산 올림픽과 2030 부산 엑스포 개최에 때맞춰 시기적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2028 부산울산 올림픽을 위해 205개 나라에서 유입되는 1만5천여 명의 선수단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부산 엑스포는 774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약 1조 9000억원 가량의 순 수익을 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저희 국토교통부는 2028 부산울산 올림픽 개최시기에 맞춰 부산까지 차세대 고속열차 해무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상용화 된 해무 운행은 부산까지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은 물론 엑스포 방문객들에게 한국의 세계 선두권 철도기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통일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북지역에 완전한 교통 인프라가 없어 한반도와 유라시아 간 물류가 해상을 통해 운반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횡단철도와 아시안 하이웨이 건설은 해상으로 운송되는 많은 화물을 육상수송으로 대체하여 운송비 절감과 운

행시간 단축으로 인한 통상적 이익을 창출합니다. 한국의 많은 산업이 수출입의존 비중이 큰 만큼 운송수단에서의 이익은 곧 국가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아시아 육상교통망건설에 큰 편익을 전망하는 바이며, 대통령 및 유관부처들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정원철 대통령 :

이 장관의 발표대로 통일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아시아 육상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국무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아시아 육상교통망은 한반도 내에 이북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토균형개발을 이끌어낼 대동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 유라시아를 한데 아우르려면 현재 상용화된 해무 수준으로 기대해서는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최근 보고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시험주행에 있는 초음속열차, 하이퍼루프가 추후 선로가 완공되는 시점에 상용화 수준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하이퍼루프를 통해서 부산에서 북경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아시아 일일생활권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무가 아닌 차세대 고속철 하이퍼루프의 상용화에 맞춰서 계획을 수정하는게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이진주 장관 :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철 대통령 :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S#7. 산업통상자원부 제언

산업통상자원부 광무철 장관 :

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언하겠습니다. 아시아 육로교통망 건설은 물류의 운임 및 통상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 간의 물리적 접근성을 한

층 더 높여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품의 대외 시장경쟁력이 상승하고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세계적 시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고 이것이 해외의 국내 투자 욕구를 상승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에 진출해 있던 국내 기업들이 유턴하여 고용이 신규 창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희는 이와 연계하여 GTI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만강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가 두만강 접경지역의 운송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현재 최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는 중국, 러시아와 대등한 지위로 지역개발을 주도해 역내 국익과 위상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화물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물론 낙후된 교통망 현대화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거점으로 서의 역할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두만강 지역 개발을 주도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며, GTI를 통해 나진선봉 지역의 철도를 현대화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나진항을 거점으로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유럽행 수출 화물을 끌어들이며 유럽까지 운송하는 복합물류 사업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이천우 경제부총리 :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GTI전신인 두만강 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을 계획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자원조달의 한계였고, 2015년 이후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이 종료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GTI관련국 중 한국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투자무역박람회도 개최했지만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차관도입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광무철 장관 :

저희는 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GTI의 국제기구화를 추진하였고, 이후의 자원조달 방안으로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외교부 정현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에 첨언하자면, 우리나라는 2007년 이후 UN 아시아태평양이 사회의 최대 기여국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해왔습니다. 저희는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교육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구상”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약 2000억을 지원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설립지원사업, 네팔 카트만두대학교 연구개발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KOICA의 “창의적 가치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부문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보건 의료, 교육, 에너지, 환경, 농촌 개발 등의 분야에서 개도국과 함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오며 깊은 유대감을 쌓아왔습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 연구개발 역량을 창업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닦아 주는 자생적 비즈니스 생태계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정착시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의 개발과정은 지속가능하며 지역의 공동발전을 추구한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안건은 아시아태평양 이사회와 한국이 공동목표로 추구해 온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류사회,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구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이정표를 제시해왔던 위와 같은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육로교통망 건설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협력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창립에 크게 기여하였고 구 북한정부가 가졌던 제재사항이 해소됨에 따라 투자유치의 장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중 창지투 투자계획과 맞물리는 GTI계획,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AIB 주요국들의 대외경제정책과 우리나라의 아시아 육로교통망 연결 사업이 맞물리며 AIB의 투자 유치가 확실시 됩니다. 이 안건은 주요 몇 개국만의 이해관계에 얽힌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편익이 증대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AIB와 아시아 개발은행에 투자 안건을 상정하여 재정지출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리스크가 해소되고 인프라가 갖춰지는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투자 의사를 표현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부와 협의하여 외자를 유치하고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으로 재정적자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철 대통령 :

음... 최근 협상이 확정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서도 편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아시아 육로교통망 관련 해당 협상들의 외교부 전망은 어떠합니까?

외교부 정현준 장관 :

아시아 육로교통망의 건설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중일 FTA 타결 후, 3국의 물류교역에 튼튼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중일 FTA는 전 세계 3위의 지역통합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중 대한민국의 경제적 편익은 GDP성장률 전망이 3.27~5.14%에 달해 약 1%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당합니다. 더 나아가 아시아 육로교통망을 기반으로 한 한중일 경제협력 관계 강화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유럽원자력공동체(ECSC/EURATOM)에서 발전한 EU가 그러했듯, 정치, 안보 분야로의 파급효과를 통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미래의 추가적인 편익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와 더불어 AIB와 그의 대척점인 TPP에 동시가입한 국가로서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그 편익을 국제적으로 확장시킬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편익들이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재원조달을 위한 예산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원철 대통령 :

통일한국은 북한이라는 리스크가 해결되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가 재정조달문제를 너무 낙관적으로 봐서는 안될 겁니다. (확신에 찬 듯)현재 확신을 갖고 진행하고 있지만 추후에 상황이 어떻게 변모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외교부에서 제시한 방안이 현 시점에서 타당할지라도 이후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에 대응할 다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께서 이 문제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속해서 논의해주기 바랍니다.

S#8. 기획재정부 제언

기획재정부 이천우 경제부총리 :

저희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의 아시아 육상교통망 건설 계획에 동의합니다. 다만, 위 사업을 위해 북한지역의 철도 및 도로의 노후화 문제와 도로 규모의 확대를 해결하기 위한 개·보수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남지역의 도로와 철도는 상당 수준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나 북한지역의 도로는 특히 수요가 많지 않아 주요 구간만 존재하는 상태며 도로 질이 좋지 않고 폭 또한 넓지 않아 건설되어있는 도로를 확대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대략 9조 5천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추가로 북한 지역의 노후화된 철도 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이 요구됩니다. 게다가 통일 이후 의료·보건사업과 교육사업, 환경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이 아직 활발히 진행 중이고 토지·건물의 사유화 문제, 통화통합 등 이에 대한 재정이전지출이 향후 북한지역의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이 안정화 될 때까지 꾸준히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일 이후 늘어나고 있는 재정적자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북한 정부의 부채까지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국가 부채비율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아시안 하이웨이 및 아시아 횡단철도 사업의 장기적 이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현 국가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광무철 장관 :

기재부에서 말씀하신 비용문제에 대한 우려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먼저 통일 이후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국방 예산의 전환이움이 대안으로 지목됩니다. 국방 예산 편성의 감축 속도보다 국방 지출의 감축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보니 그 사이의 차액이 발생하고 관련 행정적 업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발생하며 비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력적인 예산 운용책으로 위 사업 관련 부처로의 예산 전환 이움이 대안으로 요구됩니다.

정원철 대통령 :

우리가 통일을 이룬지 5년이 지났지만 이 시점에서 국방예산을 줄이고 다른 용도

를 전용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국방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 방정호 장관 :

예 대통령님의 생각에 같이합니다. 통일 전 군사적 긴장상태가 사라짐에 따라 우리 군도 통일 이후 조직 개편을 단행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한국이 이북지역의 영토 실효권을 확보함에 따라 압록강과 두만강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와 접경하게 됐습니다. 현실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국방예산 책정에 대해서는 저희 국방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현재 아시안 하이웨이의 건설 예정 구간을 포함해 접경지역의 밀입국 시도가 빈번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 지난 5년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 대비 2025년에는 123%가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의 180만 외국인 체류자 중에서 현재 23만 5천명에 다다르는 외국인이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고 그 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밀입국자의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전체 불법체류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몽고, 방글라데시, 베트남, 필리핀, 태국의 순서로 불법체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접경하게 되면서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의 밀입국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 저희 국방부는 예상합니다.

또한 테러 무장세력과 마약 유입 등의 문제로, 접경지역 감시태세를 높여야하는 상황입니다. 통일 이후 육로를 통해 중국 및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안보적인 대비태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국방부는 이북지역 관련 군 업무를 위한 적정수준의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철 대통령 :

국방부의 의견대로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는 예산 책정에 따르면 예산전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대안을 마련하길 당부합니다. 그럼 이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설치훈 장관이 발언해주십시오.

S#9. 행정자치부 제언**행정자치부 설치훈 장관 :**

저희 행정자치부는 아시안 하이웨이·횡단철도 건설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방안 종합대책”을 계획하였습니다. 첫째, 하이웨이 건설과 관련된 부처 간 연계기능 분석 및 협업 모델 개발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자체 공동사무 중 연계·협력이 가능한 중점과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ICT기술을 기반으로 전 부처가 사용하는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의 클라우드 전환을 100% 가능하도록 하여 연계의 편의성을 대폭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데이터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협력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이진주 장관 :

네. 아시아 육로교통망 건설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전 부처와 공유하여 종합행정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보실 김승훈 실장 :

음... 그 부분에 대해 제가 걱정되는 것은 도로건설 핵심정보에 대한 구축화는 잠재적인 테러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테러세력의 활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국제환경속에서 통일대한민국역시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행정의 구축은 테러세력의 국내정보 접근성을 확대시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테러를 유발하고 사회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안전부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안전부 문민상 장관 :

잠시 첨언하자면, 통일대한민국의 국민을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것은 모든 정부부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국민안전부는 외교부 및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사이버테러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국제의 공조를 통해 해당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철 대통령 :

행자부 장관 계속하세요.

행정자치부 설치훈 장관 :

다음으로 아시안 하이웨이가 건설되는 전국 도시에 건설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보충할 것입니다. 1번 노선(AH1)이 통과하는 이남지역 서울, 부산과 북한지역 평양, 신의주와 6번 노선(AH6)이 통과하는 부산, 강릉, 원산이 그에 해당합니다. 해당 공무원의 선발과 교육은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인 지방행정연수원 및 인사혁신처의 협력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이후 인사실 소관업무를 관리하는 제1차관의 구체적인 발표가 추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강은지 장관 :

하지만 행정자치부의 주장대로 도로건설 담당공무원을 충당하려면 반드시 지방행정연수원을 추가적으로 이북지역에 신설해야 합니다. 또 높은 교육수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이북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 설치훈 장관 :

고용노동부 장관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지역인재 우선채용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행정자치부는 건설기업 및 건설현황(노동자 수, 중장비 수, 건설진행도, 날씨 등의 변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ICT기반 스마트행정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이전부터 정부3.0의 목표아래 추구되어온 스마트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건설 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인 통합전산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현재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정부통합정보센터와 광주 서구에 위치한 제2정부통합전산센터의 관련 담당자들이 현장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ICT기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위 두 기간 및 하이웨이 건설지역 지방부처와의 실시간 영상회의 및 업무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부

처이전은 진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정원철 대통령 :

예, 각 부처의 논의대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동부 장관 발언하세요.

S#10. 고용노동부 제언

고용노동부 강은지 장관 :

아시아 하이웨이 정책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관련 직종 분야의 직접 고용 창출과 투자 지출 등에 따른 유발취업자를 증가시키는 등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고용여건의 향상이 기대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북지역이던 신의주, 나진, 청진, 두만강 일대를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조성, 특화된 도시개발 등을 통해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창출 등 고용에 긍정적인 면모가 보이는 것 역시 확실합니다. 하지만 지역특화산업 혹은 연계 산업과 같이 시설위주로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로 비추어 보았을 때 기획재정부의 비용예산과 맞물려 아시아 육상 교통망 정책 또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작고 정부 재정만 악화시키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곽무철 장관 :

고용노동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 부처에서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국방비 예산의 탄력적 운용 외에도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유치입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서 특히 국외부문에서 민간투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일본과 중국에서, 멀게는 동남아와 유럽, 중동으로부터의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해 중국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민간투자사업(BOT)방식으로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에 대한 투자를 받아 투자 기업에게 몇 년간 운영을 맡겨 통행료 수입으로 비용을 충당한 뒤, 정부가 양도받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

습니다. 또한, 통일이 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됨에 따라 국채발행 비용과 차관 도입 비용이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 사료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이 창출되면 도로가 건설되는 북한지역의 전반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원철 대통령 :

(엄려스러운 듯) 곽 장관 제 생각에는요, 한 지역의 고용이 창출된다 하더라도 이북지역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근로자들의 노동 생산성보다 높아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사업이 단기적인 고용 창출만 유발하여 추후 실업률이 가중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군요.

고용노동부 강은지 장관 :

(많이 공감한다는 듯이) 실제로 남북지역 주민들의 노동생산성 비교 결과 통일 전 북한의 노동생산성은 약 270만원으로 통일 전 대한민국의 1980년 수준과 유사했습니다. 이러한 노동생산성의 격차는 결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차이를 불러왔고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어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인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아시아 육상 교통망 정책으로 인해 남북지역 노동자의 근로조건 차이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는 지역갈등으로 인한 또 다른 비용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이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의 주장대로 비용을 민간분야에서 충당하여 건설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지역적 노동생산성의 차이에 따른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침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근로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에 따른 관련 부처들의 이행을 요망합니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도로 및 철로인근 사업장 소음, 분진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통일 전 북한정권의 SOC 건설은 강제노역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아 근로환경이 참혹합니다. 따라서 공사 소음측정 등 소음해소방안 협의 등을 통해 소음방지시설 설치를 제한합니다.

환경부 안지호 장관 :

고용노동부의 주장에 대해서 같은 의견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아시아안 하이웨이를 환경적으로 검토·검사하는 역할을 할 것 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 3장 제1절 제22조에 따라 아시아안 하이웨이 건설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과해야만 현실화가 가능합니다. 한반도에는 아시아안 하이웨이의 87개의 경로 중 주 경로로 평가되는 AH1, AH6 및 AH32가 들어섭니다. 각각 국토를 905km, 1262km, 60km로 총 2227km를 관통해 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면밀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기존의 실효성 없는 형식적 환경영향평가에 그치지 않고 사전, 사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친환경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안전한 근로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부 문민상 장관 :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우려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희 국민안전부는 하이웨이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이 이루어진 후 북한지역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내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여론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저희 국민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건설현장의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위해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통해 사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설치훈 장관 :

그래서 저희 행정자치부는 건설이 시작된 후 사전조사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건설지역 주변 소방청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신의주에 종합소방청을 건설할 계획이며 이후 소도시에는 건설지역 주변에 소방지부를 만들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강은지 장관 :

국민안전부와 행정자치부의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인재 우선채용이 필요합니다. 아시아 육상교통망 사업은 이북지역 주민을 30~50% 이상 고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이북지역 주민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이북지역 인구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토교통부 이진주 장관 :

저희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 선정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30%이상을 북한노동자를 고용하고 친환경 건설기술을 보유한 건설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사들도 고용조건과 환경에 대한 책임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교통망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는 엄격한 환경기준과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원철 대통령 :

국민안전부에서 사고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인구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지금 나온 수준을 넘어서는 정책을 내놓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이남지역으로 이주해온 이북지역민이 상당수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수립되지 않는다면 가면 갈수록 생활터전을 떠나는 국민들이 급증하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최적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논의된 내용과 그 이상을 도출해줄 것을 두 분 장관님께 당부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

예 (고개 끄덕이며)

정원철 대통령 :

제언 계속 이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S#11. 문화체육관광부 제언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주 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언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시안 하이웨이의 거점 도시들인 평양-개성-서울에 있는 문화재들을 기반으로 역사문화벨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추가적인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과 같은 세부정책들을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역사문화벨트가 조성될 지역들의 문화재 보존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 이전 북한 정권의 문화재 보존 상황이 다소 열악했던 관계로 역사문화벨트를 위한 주변 문화재들의 총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민안전부 문민상 장관 :

저희 국민안전부에서는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북한지역 전반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여 문화재 훼손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함께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주 장관 :

감사합니다. 추후 국민안전부와 협의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해보겠습니다. 세부정책에 대한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양강도와 함경북도 북쪽지역을 동계스포츠의 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무사히 치러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동계스포츠와 관련된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통일 전과 달리 통일 대한민국은 동계스포츠에 관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통일 전 북한에서 건설된 양강도 지역의 삼자연스키장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와 민간합동 투자를 통해 양강도와 함경북도를 제 2의 평창으로 특화시킬 예정입니다. 기존의 높은 지형과 큰 대륙성 기후로 인해 발전을 꾀하기 어려웠던 도시들을 이 점을 이용해 개발하여 다른 지역들과의 격차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북 동계스포츠 특화도시는 아시아 육로교통망의 건설로 인한 뛰어난 접근성이 향상되어 외부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명소가 될 것이며 곧 국익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환경부 안지호 장관 :

아, 이 부분에 대한 환경부의 제언내용이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키장의 경제력은 적설량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함경북도와 양강도의 적설량이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공눈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에너지와 수자원이 소모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현재 함경북도와 양강도에는 멸종위기 종인 아무르 표범(Amur leopard), 우수리 승냥이(Ussuri dhole) 등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5년 출판된 영국의 응용생태학 저널(Journal of Applied Ecology)에 의하면 동계스포츠에 필수적인 제설기가 이러한 동물의 생태환경에 해를 가한다고 합니다. 즉 비용뿐만이 아니라 환경파괴와 그에 따라 멸종위기종이 멸종하는 것을 막을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 이천우 경제부총리 :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장대로 동계스포츠시설 및 문화단지를 조성한다 하여도 주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성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변 인프라 시설의 설립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감당할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철 대통령 :

관광명소를 늘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환경파괴로 이어진다니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주 장관 :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부는 2028 부산울산 올림픽과 2030 부산엑스포를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공항, 기차역 등 주요 교통시설에 통역인원을 추가 배치하고, 부산 표지판과 안내판에 다양한 외국어도 추가 기재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이진주 장관 :

김 장관 의견에 첨언하자면, 저희 국토교통부도 두 차례 큰 국제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통 편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부산 울산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시아 육상교통망을 통해 유입된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과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교통비도 편리하게 지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철 대통령 :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로 통일 대한민국이 좋은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법무부장관님 발언 하십시오.

S#12. 법무부 제언**법무부 김채란 장관 :**

저희 법무부는 아시아 육상교통망 건설을 통한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관문을 확충하고자합니다. 반면에 새로운 관문을 늘리는 것은 해외 테러세력 침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유관부처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첫째, 아시안 하이웨이 AH1 구간과 AH6 구간이 개통될 경우 일본, 중국, 러시아 3개국을 비롯한 인접국과의 왕래가 급증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거쳐 대한민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AH1 구간과 AH6 구간이 지나는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규모를 확대하고 육로를 전담하는 부서를 증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의주(AH1)와 나선(AH6)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여 도로와 철도를 통한 출입국 업무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철 대통령 :

신의주와 나선 사무소의 경우에도 이북지역민 우선채용에 대한 지침을 적용한건가요?

법무부 김채란 장관 :

예, 신설 사무소에는 통일 이전에 운영해왔던 파주(AH1)와 고성(AH6)의 남북출입사무소 인원을 한시적으로 신의주와 나선에 각각 우선 배치하고 지역인재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지역민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 내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에 필요한 제반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아시아 육상교통망 개통은 인접한 3개국뿐이 아닌 전 세계와의 관문을 넓히는 것으로 반가워야 할 일 이면서도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국제 테러집단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 저희 법무부는 국정원, 검경, 군 등 테러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했으며, 외국인의 지문채취 등 수사를 위한 법 개정을 마친 상황입니다. 나아가 이웃국가들과의 테러 수사공조체제를 확립하여 아시아 육상교통망이라는 문호의 개방이 테러와 범죄의 확산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는 추가적인 보고 드립니다.

정원철 대통령 :

테러 공조체제 구축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환경 관련한 사례분석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에 관해서 환경부 장관님 발언하세요.

S#13. 환경부 제언**환경부 안지호 장관 :**

저희 환경부에서 조사한 결과 이 사안과 비슷한 사례로 범유럽교통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범유럽교통네트워크의 사례에서 중금속 슬러지, 폐수와 도로 방방재에 의한 토양, 수질오염과 철도 용제용액과 폐산, 폐유에 의한 지하수와 토양 오염 등 교통네트워크의 환경문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중금속 슬러지, 폐수, 도로 방방재와 철도 용제용액과 폐산, 폐유의 배출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인원을 충원해 환경보전에 힘쓰겠습니다. 수송수단간 조화만을 중점에 두고 환경보전에 안일한 모습을 보여 온 범유럽교통네트워크의 사례를 반면교사하여 국토부와 협력해 아시아 육로교통망에서 환경보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논의되던 국경부근 철책선 구축 방안에 대해 이의

가 있습니다. 안보차원에서 중요성이 있다 해도 중국 측 철책선이 이미 구축되어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무분별한 철책선 건설은 야생동물 이동 방해와 미관의 저해를 가져온 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협조를 요구합니다.

정원철 대통령 :

유럽교통네트워크의 문제점을 타산지석삼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도록 안장관께서 추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방부 발언하십시오.

S#14. 국방부 제언

국방부 방정호 장관 :

2016년 이후 안보차원에서 국내적으로 논의된 철책선 구축의 경우 야생동물 이동과 미관의 저해라는 환경부의 협조요청과,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민원을 수용하여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결정은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이미 중국 측 철책선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북방지역의 긴장완화라는 차원에서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국방부는 밀입국 시도를 막기 위해 접경지역 초소 현대화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38도선 이북지역 군사시설이 매우 낙후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접경지역 초소에 열영상 감시장비(TOD)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AH1, AH6 두 구간을 비롯하여 압록강, 두만강의 강폭이 좁아지고 수위가 낮은 지역에는 CCTV를 배치해 상시 운용하는 방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입국 시도자에 대해서는 본국 송환 조치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정원철 대통령 :

지난번 회의에서 나온 부처 간 견해차를 좁힌 결과군요. 그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까요?

산업통상자원부 광무철 장관 :

흐흠 저 대통령님 외교부 장관 발언이 남아있습니다.

정원철 대통령 :

(민망해하며) 현안이 산적이 했다보니까 요새 좀 피곤합니다. (장관들 웃음바다) 정현준 장관 마무리 하시죠,

S#15. 외교부 제언

외교부 정현준 장관 :

저희 외교부에서는 각국 국내의 국제 간선도로로서 이용할 수 있는 고규격도로 정비 방법, 규격, 부대시설 등에 관한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도로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가에 따라 도로대장의 정비상황이 각각이어서, 국제연합이 공식적으로 도로 상황을 요청하여도 그러한 상황을 보고할 수 없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비촉진을 추진하려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하기 곤란하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외교부에서 1959년 유엔에서 처음 논의된 국제도로기구 창설에 주도적으로 움직인 결과 최근에 기구본부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평양에 자리잡을 국제도로기구본부는 아시아 하이웨이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 진두지휘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제도로기구는 가시적으로는 아시아 하이웨이가 지나가는 31개국 간의 도로, 표지판과 신호체계를 정립하는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아시아 하이웨이는 중국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와 한반도의 분단 고착화로 핵심구간이 빠져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는 듯 했으나 중국이 노선 수정을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이 통일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회원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세 부적인 도로 표준에 관한 논의만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국제도로기구의 핵심회원국으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여 구체적 논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철 대통령 :

국제도로기구 창설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조를 하여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발언하실 국무위원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과정 진행)

S#16. 국무회의 마무리

정원철 대통령 :

국민의 성원에 부응하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무부처의 업무추진에 따라 각 부처가 협조하여 원활한 진행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적 염원인 통일의 후속단계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완전한 통일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적 사명에 국무위원들께서 국가를 위한 우국충정으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0회 국무회의의 폐회하겠습니다.

(각 장관들 서로 인사하여 마무리)

<붙임1>

2016 전국 대학생 통일모의국무회의의 경연대회 요약본

- ◆ 안건 : 아시아 육상교통망 건설 계획
- ◆ 등장인물 : 대통령,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실장,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민안전부장관

◆ 추진배경

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달성하고 통일을 이룩.
- 나. 아시아 국가들과 신뢰를 통해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 다. 신뢰를 동력으로 높은 수준의 국가간 협력을 도모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2. 2030 부산 엑스포 접근성을 위한 고속철도 건설

- 가. 한반도 북부의 지리적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교통수단
- 나. 접근성 증진으로 예상 이상의 이익창출 기대

3. 물류 운송수단의 효율성

- 가. 해상운송에 비해 운송비용 감축과 운송시간 단축
- 나. 육상교통을 통해 유라시아 국가들은 복합물류 네트워크 구축
- 다. 유라시아 국가들과 새로운 경제협력 관계로 발전

· 추진계획

1. 한반도 서쪽지역을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

- 가. 1번국도(AH1) 개성-평양구간의 도로 보수공사
- 나. 이북지역 1번국도(안주시~신의주시)구간 신규공사
- 다. TKR 1 노선을 TCR과 TSR의 접점지역인 중국 선양까지 연결

2.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an Initiative)의 무역을 위한 시설 보충

- 가. 두만강개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물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화물터미널 증진.
- 나. 무역증진을 위해 화물터미널과 육상·해상운송시설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
- 다. GTI 참여국과의 협력을 통해 물류보관·운송 인프라 건설

3.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3대 계획 중 창조의 대륙 목표 달성.

- 가. 유라시아 교통망을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주도
- 나. 과학기술과 ICT를 융·복합된 사업을 수출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
- 다. 유라시아 공간정보산업 시장을 선점

◆ 기대효과

1. 아시아 통상물류 선도국가

한반도 도로망 연계가 확대될 경우 상당한 운송비용 및 운송시간의 절감효과가 발생한다. 현재 부산에서 유럽(베를린)까지 운송시간은 38~40일 소요, 운송비용은 약 1900달러/TEU이나 아시아 횡단철도와 아시아 하이웨이 건설을 통해 중국 횡단철도(TCR)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의 연계를 통해 육로수송이 가능해진다면 운송시간이 최대 13~16일, 운송비용은 약 25~35% 절감이 가능하다.

2. 이북지역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향상

통일 이후 2025년 현재 통일대한민국은 이남지역과 이북지역의 소득불균형,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있다. 아시아 하이웨이, 아시아 횡단철도 건설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므로 상당한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통일대한민국 정부는 이북지역 노동자들에게 30%이상의 의무할당제를 부여하여 이북지역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해당지역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향상은 SOC건설 지역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건설산업(주거시설, 상권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발시킨다. 이는 지역적인 생활권을 형성하여 이북지역 전반에 대한 개발을 향상시킬 수 있다.

3. 동북아 경제협력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성공은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주어 동북아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의 경제협력이 가능하다. 이는 동북아시아 국가들간의 연계성을 높여주어 세계시장에서 통일대한민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경제협력의 확대는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신용수준을 높여주어 과거에 대북 리스크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효과를 막을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전반적인 비용절감효과를 유발시킨다. 또한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GTI)를 통한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협력을 확대시켜 세계시장에서의 통일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 참고사항 | 유관부처 토의사항

1. 국토교통부

가. 현재 이북의 많은 도로들은 UN 경제사회위원회(ESCAP)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 개성-평양구간의 도로는 보수공사 필요. 한편, 평양 이북에 아시아 하이웨이 노선으로 쓰일 이북지역 1번국도(안주시 - 운전군 - 정주시 - 광산군 - 선천군 - 동림군 - 염주군 - 용천군 - 신의주시)는 새로운 공사 필요. 개성-평양 고속도로는 한 국정부가 보수 공사하고, 이북지역 1번국도는 중국의 협력을 구해 건설할 계획.

나. 아시아 하이웨이의 모든 고속도로는 스마트 하이웨이를 기본으로 건설. 스마트 하이웨이는 달리는 차량에 각종 도로 교통 정보, 위험 경보 신호 등을 자동으로 무선 전달하여 각종 사고를 줄이고, 소통을 원활케 하는 지능 교통 서비스(ITS) 기술로 이를 통해 많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 기술은 이미 통일 이전 2015년부터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의 산업 중 하나이며 이미 기업들과 함께 R&D를 진행해왔으며, 그 중 많은 부분이 상용화 되고 있는 단계. 이 기술로 한국 교통사정에 낯선 외국 운전자들의 사고를 많은 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다. 아시아 횡단철도 연결을 위한 철도 건설 실시. 그 1차 계획으로 이남지역의 경부선과 평양-신의주-중국 선양지역으로의 서해안 라인을 우선 건설. 중국의 선양지역은 중국횡단철도(Trans-China Railway)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rans-Siberia Railway)가 만나는 곳으로 한국교통철도(Trans-Korea Railway)가 선양지역과 연결된다면 아시아 횡단철도의 남부노선과 북부노선으로 접근 할 수 있음.

2차 계획으로 통일이전부터 블라디보스톡 - 하산 -나진 구간은 구 북한정권과 러시아가 함께 철도를 건설하였다. 따라서 부산-강릉-원산-충진 지역을 철도로 연결하고 이 철도를 나진-하산-블라디보스톡과 연결하여 한반도 동해안 노선을 완성할 계획.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바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태평양지역을 건너온 물류가 한반도 남해안지역으로 들어온 뒤, 이 노선을 따라 러시아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2. 산업통상자원부

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추진할 계획. 두만강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가 두만강 접경지역의 운송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현재 최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는 중국, 러시아와 대등한 지위로 지역개발을 주도해 역내 국익과 위상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화물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물론 낙후된 교통망 현대화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거점으로서의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음

3. 행정자치부

가. 아시아 하이웨이·횡단철도 건설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방안 종합대책”을 계획. 하이웨이 건설과 관련된 부처 간 연계기능 분석 및 협업 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임. 중앙·지자체 공동사무 중 연계·협력이 가능한 중점과제를 선정하려함. ICT기술을 기반으로 전 부처가 사용하는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의 클라우드 전환을 100% 가능하도록 하여 연계의 편의성을 대폭 높일 예정임.

나. 아시아 하이웨이가 건설되는 전국 도시에 건설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보충할 계획임. 1번 노선(AH1)이 통과하는 이남지역 서울, 부산과 이북지역 평양, 신의주와 6번 노선(AH6)이 통과하는 부산, 강릉, 원산이 해당지역. 해당 공무원의 선발과 교육은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인 지방행정연수원 및 인사혁신처의 협력을 통해서 진행.

다. 건설기업 및 건설현황(노동자 수, 중장비 수, 건설진행도, 날씨 등의 변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ICT기반 스마트행정을 구축. 통일 이전부터 정부3.0의 목표아래 추구되어온 스마트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건설 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성가능. 관련 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인 통합전산센터를 통해서 이

루어질 계획.

라. 건설지역 주변 소방청 배치할 예정임. 평양, 신의주에 종합소방청을 건설하고 이 후 소도시에는 건설지역 주변에 소방지부를 만들 계획임.

4. 고용노동부

가. 근로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 현재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함. 도로 및 철로인근 사업장 소음, 분진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통일 전 북한정권의 SOC 건설은 강제노역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아 근로환경이 참혹하기에 공사 소음측정 등 소음해소방안 협의 등을 통해 소음방지시설 설치를 제안함.

나. 지역인재 우선채용이 필요. 아시아 하이웨이 사업은 이북지역 주민을 30 ~ 50% 이상 고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요구함. 이는 이북지역 주민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이북지역 인구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5. 환경부

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아시아 하이웨이를 환경적으로 검토·검사하는 역할을 할 것. 환경영향평가법 제 3장 제1절 제22조에 따라 아시아 하이웨이 건설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과해야만 현실화가 가능한 실정. 한반도에는 아시아 하이웨이의 87개의 경로 중 주 경로로 평가되는 AH1, AH6 및 AH32가 들어서는데, 각각 국토를 905km, 1262km, 60km로 총 2227km를 관통해 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면밀한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증대. 환경부는 이에 대해 기존의 실효성 없는 절차적 환경영향평가에 그치지 않고 사전, 사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친환경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근로자들의 지속가능한 근로조건과 전반적인 건설의 진행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

나. 환경부에서 조사한 결과 이 사안과 비슷한 사례로 Trans European Network - Transportation (TEN-T) 범유럽교통네트워크가 있음. 범유럽교통네트워크의 사례에서 중금속 슬러지, 폐수와 도로 방빙재에 의한 토양, 수질오염과 철도 용제 용액과 폐산, 폐유에 의한 지하수와 토양 오염 등 교통네트워크의 환경문제를 찾을 수 있었음. 이에 대해 환경부는 중금속 슬러지, 폐수, 도로 방빙재와 철도 용제 용액과 폐산, 폐유의 배출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인원을 충원해 환경보전에 박차

를 가할 것. 유럽운송시장 통합을 목표로 수송수단간 조화만을 중점에 두고 환경 보전에 안일한 모습을 보여온 범유럽교통네트워크의 사례를 반면교사하여 국토 부와 협력해 아시아 육로교통망에서 환경보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할 것임.

6. 국민안전부

가.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해야함. 통일이 이루어진 후 이북지역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이 미흡한 상황이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내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여론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건설현장의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위해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통해 사전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7. 외교부

가. 2015년 출범한 AIB의 창립회원국으로써 가입과 투자유치에 제한을 받던 북한문제가 통일로서 자연스레 해결이 되었고 AIB 주요국들의 대외경제정책과 맞물리며 AIB의 투자 유치가 확실시 됨. 그리고 이 안건은 주요 몇 개국만의 이해관계에 얽힌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편익이 증대되는 사안이기에 AIB와 ADB에 투자 안건을 상정하여 그들의 투자를 유도해 내어 재정지출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음.

나. 1959년 유엔에서 처음 논의된 국제도로기구 창설에 주도적으로 움직인 결과 최근에 기구본부를 유치하게 되었음. 평양에 자리잡을 국제도로기구본부는 아시아 하이웨이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 진두지휘를 할 것으로 기대됨. 국제도로기구는 가시적으로는 아시아 하이웨이가 지나는 31개국 간의 도로, 표지판과 신호체계를 정립하는 이정을 제시. 국제도로기구의 핵심회원국으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여 구체적 논의를 이끌어 낼것.

8. 문화체육관광부

가. 양강도와 함경북도 북쪽지역을 동계스포츠의 도시로 만들 계획을 검토. 대한민국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무사히 치러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동계스포츠와 관련된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 그러나 통일 전과 달리 통일 대한민국은 동계스포츠에 관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통일 전 이북지역에서 건설된 양강도 지역의 삼지연스키장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와 민간합동투자를 통해 양강도와 함경북도를 제2의 평창으로 특화시킬 예정. 기존의 높은 지형과 큰 대륙성 기후로 인해 발전을 꾀하기 어려웠던 도시들을 이 점을 이용해 개발하여 다른 지역들과의 격차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나. 아시아 하이웨이의 거점 도시들인 평양-개성-서울에 있는 문화재들을 기반으로 역사문화벨트를 조성. 이를 위해서 역사문화벨트가 조성될 지역들의 문화재 보존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통일 이전 북한 정권의 문화재 보존 상황이 다소 열악했던 관계로 하이웨이 역사문화벨트를 위한 주변 문화재들의 총체적인 조사가 필요.

9. 법무부

가. 아시아 하이웨이 AH1 구간과 AH6 구간이 개통될 경우 일본, 중국, 러시아 3개국을 비롯한 인접국과의 왕래가 급증할 것.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거쳐 대한민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AH1 구간과 AH6 구간이 지나는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규모를 확대하고 육로를 전담하는 부서를 증설할 예정임.

나. 신의주(AH1)와 나선(AH6)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여 도로와 철도를 통한 출입국 업무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신설 사무소에는 통일 이전에 운영해왔던 파주(AH1)와 고성(AH6)의 남북출입사무소 인원을 한시적으로 신의주와 나선에 각각 우선 배치하고 고용노동부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 지역인재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지역민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할 것.

다. 아시아 하이웨이 개통은 인접한 3개국뿐만 아닌 전 세계와의 관문을 넓히는 것이므로 국제 테러집단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 법무부는 국정원, 검경, 군 등 테러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했으며, 외국인의 지문채취 등 수사를 위한 법개정을 마친 상황. 나아가 이웃국가들과의 테러 수사공조체계를 확립하여 아시아 하이웨이이라는 문호의 개방이 테러와 범죄의 확산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

10. 국방부

가. 국방부는 밀입국 시도를 막기 위해 접경지역 초소 현대화 사업을 계획 중에 있음. 38도선 이북지역 군사시설이 매우 낙후한 상황이기에 우선적으로 접경지역 초소에 TOD(열영상 감시장비)를 배치할 예정. 또한 AH1, AH6 두 구간과 압록강과 두만강의 강폭이 좁아지고 수위가 낮은 지역에는 CCTV를 배치해 상시 운영하는 방안으로 진행할 것. 밀입국 시도자에 대해서는 본국 송환 조치를 원칙으로 할 계획.



우리가 이룬 통일

류영주 (성균관대 글로벌리더학부)

무심코 지나가던 강의실, 그리고 그 옆에 붙여있는 포스터가 나의 한 학기를 바꿔놓았다. 한번 끌리면 꼭 도전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 나는 평소 관심 많던 분야인 통일과 관련된 대회인 '통일모의국무회의'를 보자마자, 이거다 싶었다. 법조인의 꿈을 가지고 있고 특히 통일법제에 대해 공부를 해보고 싶었던 터라 나에게 통일모의국무회의는 꽤나 흥미로웠다. 대회를 참가하려고 마음을 먹고, 통일에 관한 아카데미를 함께 수료했던 학교 언니와 함께 이 대회를 함께 할 사람들을 모았다.

통일에 관심이 있고 대회에 열정을 품고 참여할 마음이 있다는 두 가지의 공통점만으로 모인 우리는 서로 처음 보는 사람도 많아 서먹하기도 하였고 다들 모의국무회의는 처음 접하였기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였다. 통일한국모의국무회의 지원국 측에서 제공해준 길라잡이를 분석하고 작년 우승팀들의 시나리오를 몇 번이고 검토하면서 대회에 대한 감을 잡아가기 시작했다.

가장 문제였던 것은 주제선정, 안건선정이었다. 통일 5년 후 편익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북아 신 성장 동력을 이끌 수 있는 국무회의 주제라. 주제 선정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통일의 편익, 편익 말하지만 실은 그 편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많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농업에 관한 안건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나왔지만, 두 번째 안건인 관광은 안건이 최소 3번이 바뀌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아무래도, 참신성 부분에서 뒤처지고 동북아의 편익과 연결하는 논리 구조를 찾기 힘든 것이 큰 요인이었을 것이라.

평화 콘텐츠를 이용한 평화 안보 관광으로 시작한 두 번째 안건은 1차 서류심사와 예선을 거듭하면서 안건의 내용과 시나리오가 거의 매번 뒤집어졌고 결국 백두대간 산악관광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다. (매번 바뀐 덕분에, 하루 이틀 만에 대본을 작성하는 스킬 아닌 스킬도 늘었다.) 본선까지 근 3주간 카페에서, 학교 강의실에서 거의 밤을 새며 팀원들과 주제와 부처들의 제언을 짜고 시나리오를 완성하였다. 우리끼리 요즘 가족이나 룸메이트보다 팀원들을 훨씬 많이 본다는 우스갯소리(우스갯소리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자명한 사실이지만)는 대회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팀원들과 자주 접촉하고 끊임없이 통일모의국무회의에 대해 고민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통일 교육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통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도덕책에 나오는 통일의 당위성과 편익들을 일방적인 지식으로 전달받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의미와 가치를 직접 찾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통일 공부였다. 나아가, 팀원들과의 협력에서 통일 교육의 참 의미를 새로이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 통통배팀의 팀원들은 각자 살아온 환경과 생각들이 정말 달라서 서로 부대끼는 과정가운데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다. 각기 다른 지역과 학교(성균관대, 경인교대, 서울교대, 충북대)에서 온 사람들. 다양성은 우리의 강점이자 걸림돌이었다. 통일로 통하는 배라는 점, 우리는 정말 통일 하나밖에 공통점이 없다는 점, 각자가 통통튀는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팀명 '통통배'는 우리의 모습을 정말 잘 표현한 이름이었다. 이렇게 너무도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통일의 주체인데 이들과 통일이라는 하나의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통일 준비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 그 자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 자체가 하나의 통일을 경험하면서 근 3주간 의식주를 잃어버렸던 피폐한 대회준비의 삶들에게 위로가 되고 보상이 된 것은 통일부장관상, 해외연수, 그리고 상금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성장한 우리 자체였던 것 같다.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통일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나와 다른 팀원들을 포용하고 기꺼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 두서없이 이야기하였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통일은 동화 속에서 나올 법한 거리가 먼 상상속의 개념이 아니라 각자의 삶속에 마음속에 있는 작은 외침인 것 같다.

세상의 소리를 잠시 제쳐두고 통일의 외침을 가만히 들어보자. 더욱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통일의 과정에 함께하여 그 기쁨과 감동을 맛보길 진심으로 바란다.

통일.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합치다.

이천우 (충남대 경제학과)

통일.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합치다. 하나였던 우리는 나누어졌고 다시 하나가 되기를 71년간 기다려왔습니다. 71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기에 나누어진 우리의 환경 속에서 둘로 나뉘는 우리가 하나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그만큼 늦춰졌기에 가능성에 대한 의문까지 품게 되었고 이는 다시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우리가 오랫동안 가졌던 문제인 만큼 중요성을 몸소 느끼기 어려웠고 저 또한 남 일인 듯이 생각하고 나와는 먼 이야기로 치부해왔습니다. 분단인 상태에서 태어나 분단된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에 분단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고, '언젠간 되겠지', '누군가 노력하고 이루겠지'라는 생각으로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대회에 참여하면서 여러 자료를 조사하기도하고 통일의 필요성, 당위성을 제 스스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초등학교 때 백일장을 쓰기위해 단지 추상적으로 통일에 대해 스스로 고찰해본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료조사를 하고 대본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제 스스로에게서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자문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필요하고 당위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대본을 쓰는 것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분단된 상황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만큼 분단된 상황은 자연스럽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단된 상태로 지내온 기간보다 훨씬 긴 기간을 우리는 하나로서 존재했고 하나로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것이 원래는 통일된 상태인 것이고 부자연스러운 상태를 자연스럽게 느끼는 지금이 상당히 역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모의국무회의대회는 나와는 상관없고 멀게만 느끼던 '통일'이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깊게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남의 일이었던 일을 내 일로 인식하게 되었고, 국무회의라는 일반인에게 생소한 구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이지만 그만큼 일반인에게는 어렵고 먼 기관이었습니다. 막상 대본을 쓰려하니 그것의 존재는 알았지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하는지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각 부처의 장관이 참여하는 자리에서 정책을 심의하는 자리이기에 아

무리 '모의'국무회의일지라도 그 권위와 포맷은 유지하며 부분적으로 희극적 요소를 넣어 상대적으로 가볍게 표현하려 노력했습니다.

통일과 국무회의와는 별다른 연결고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경제학도인 저에게 이번 대회는 색다르고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대회준비를 하며 궁금증이 들었지만 해소하지 못했던 의문점이나 현 통일부의 미래 설계에 대해서도 통일부 장관님과 질의응답에서 해결할 수 있어서 올해 들어 가장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 대회가 더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에 다시 불을 당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대회에서, 이후에 참석하게 되는 통일리더캠프에서 배웠고 배울 점들을 1회성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2회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현장



예선 현장 예선 오리엔테이션 및 경연

결선 현장 결선팀 진행 현장

V. 제2회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의 경연대회 현장



결선 현장

최우수상 시상

V. 제2회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의 경연대회 현장



우수상 및 장려상 시상

통일 토크 콘서트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발행일 : 2017년 4월

발행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과

0101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 (수유동)

전화 02) 901-7075 팩스 02) 901-2158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korea.go.kr